

[종합·해설]

“교과서에 좌편향 근거 없다” 수정 거부

집필진, 교과부 수정 권고안 조목조목 반박

교과부 “논리적으로 따져본 뒤 관찰시킬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한국 균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에 대해 교과서 저자들이 4일 “교과서 견인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 권고를 거부한다”며 권고안 철회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6종의 균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두산동아를 제외한 5종(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의 교과서 저자들로 구성된 집필자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최근 균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과서 저자들이 공동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과부가 한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성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교과서 견인정책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쳐사”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재 6종의 교과서들은 1997년 김 영삼 정권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에 입각해 집필된 것들”이라며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



한국근현대사 집필자 협의회는 4일 서울 정동 한 레스토랑에서 ‘교과부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황철호(왼쪽)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던 교과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좌편향 논란에 가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